

■ 쿠바라는 이름의 거울

박 세 길

오늘날 한국 사회는 여러 모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추진으로 촉발된 2008년 촛불시위는 이명박 정권의 위기를 넘어 1987년 이후 지속된 정치체제의 총체적 위기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 발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는 대외의존적 발전을 거듭해온 한국경제에 직격탄을 안겨다주고 있다. 경기는 곤두박질치고 있고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서는 등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위기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위태로운 기회이다. 위태롭지만



새로운 기회일 수 있는 것이다.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살리려면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성찰을 하자면 거울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서 쿠바는 한국 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매우 좋은 거울이 될 수 있다.

쿠바는 지구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낯선 곳이며 1960년대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 온 다분히 이질적인 나라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대표적인 지점 몇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식량 위기로부터 탈출

세계경제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가장 불안해지고 있는 안정된 식량 확보이다. 식량은 인간 생존의 필수 수단으로서 공급이 축소되거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수요가 줄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국제 곡물 메이저들이 수요자를 상대로 농간을 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08년 한 해를 뒤흔들었던 식량 가격 폭등은 그러한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은 바로 이 같은 위험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한국은 고도성장을 통해 공업대국, 무역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그 과정에서 농업은 극심한 희생을 겪어야 했다. 소득 불안과 열악한 농촌 환경 탓으로 지속적인 이농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농업노동력의 절대 다수가 60대 이상의 노령층으로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농촌의 쇠락은 식량 자급율의 하락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2008년 현재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5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매년 수입하는 곡물은 1,500만t에 이

른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밥상은 수입농산물에 의해 무참히 점령되고 말았다.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관해서 극히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왔다. 인구에 비해 농지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에서 수입 농산물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완벽한 의미에서 식량 자급을 실현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바로 이 점에서 쿠바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쿠바는 혁명 이후 사회주의 길을 걸으면서 소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다. 쿠바는 사탕수수 제배와 니켈 등 광산물 채취에 주력했고 소련은 정치적 고려에서 쿠바의 사탕을 국제 가격의 5.4배나 되는 고액으로 수입했다. 반면 소련은 매우 낮은 가격으로 석유를 쿠바에 공급했으며 쿠바는 그중 일부를 외화 획득용으로 재수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소련이 붕괴하고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경제 봉쇄가 강화되자 쿠바는 파멸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소련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석유, 원료, 기계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공장의 80퍼센트가 문을 닫았고 노동자의 40퍼센트가 실업자로 전락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절대적인 식량 부족이었다. 소련으로부터 식량 공급이 단절된 것은 물론이고 비료와 농약, 석유 등의 부족으로 자체 생산마저 어려워진 것이다. 1991년 제4회 공산당대회에서 행한 카스트로의 보고에 따르면 쌀은 이미 바닥이 났고 콩은 50퍼센트, 분유는 22퍼센트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쿠바가 선택한 것은 농약과 화학 비료



쿠바는 이러한 도시농업을 통해서 식량위기에서 탈출했다.

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도시 스스로 필요한 식료품을 생산하는 도시농업을 정력적으로 추진했다.

유기농으로의 전환은 비료와 농약 공급이 어려워진 조건에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전 시기 과도한 화학 비료 투입으로 인해 이미 토양이 극도로 산성화되어 있는 상태였다. 말하자면 땅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래저래 유기농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위기는 이를 조금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된 셈이었다.

식량 위기 돌파의 축의 하나였던 도시농업 역시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시민들은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장을 포함해 도시 안에 널려 있던 공터를 농토로 바꾸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발코니와 안마당, 옥상 등 공간만 있으면 농사를 지었다. 그리하여 채소뿐만 아니라 약초와 각종 과일, 나아가 닭과 돼지 등 온갖 농축산물이 도시 안에서 길러졌다. 도시 안의 좀 더 넓은 공간에는 쌀이 경작되어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였다. 그 결과 1999년 전체 쌀의 65퍼센트, 채소의 46퍼센트, 오렌지를 뺀 과일류의 38퍼센트가 도시에서 생산 공급되기에 이르렀다.

농업에서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위기에 돌입하던 당시 45퍼센트에 수준에 머물렀던 쿠바의 식량자급률은 10년 뒤 95퍼센트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더욱 다행스러웠던 것은 이 기간 동안 상당히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아사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극한 상황에서 기적을 일구어낸 것이다.

에너지 위기 극복

세계경제의 위기가 가중되면서 한국을 엄습할 가능성이 큰 것 중의 하나는 다름 아닌 에너지 위기이다.

한국은 세계적인 에너지 고소비 국가이다. 한국의 2002년도 에너지 소비는 절대 규모에서 세계 10위이고, 그 중에서도 석유 소비는 세계 6위에 해당한다. 국민소득 대비 에너지 소비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4년의 경우 영국의 3배, 프랑스의 2.45배, 미국의 1.6배였다. 그러면 에너지 구성은 어떤가? 한국은 전체 에너지 중 풍력, 태양광, 수력 등 대체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1퍼센트에 불과하며 전체 에너지의 97.3퍼센트를 해외에서 수입해 왔다. 그 중에서 석유는 세계 4위, LNG는 세계 2위의 수입대국일 만큼 막대한 양을 수입해 왔다.

한국이 얼마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는 교통시스템을 보

면 금방 알 수 있다. 한국의 교통시스템은 철저하게 에너지를 다량으로 소모하는 자동차 중심으로 짜여 있다. 더욱이 승용차의 경우 중대형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부르짖어 왔던 정부 부처의 업무용 차량조차도 경차의 비중이 불과 1.6퍼센트에 불과할 정도이다. 자동차제조회사, 석유회사, 건설회사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같은 교통 시스템과 관련해서 쿠바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련의 붕괴로 석유 공급이 급감하자 그동안 교통수단의 주종을 이루었던 자동차들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도리 없이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 다녀야 하는 상황이



쿠바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되고 말았다. 이 같은 곤란을 타파하기 위해 쿠바가 선택한 것은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위기 전 3만 대에 불과하던 수도 아바나의 자전거 수는 6년 만에 200만 대가 넘게 되었다. 이는 아바나의 인구수를 감안할 때 시민의 대부분이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쿠바의 이같은 선택은 석유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지책이기도 하였지만 자전거가 지닌 장점을 고려한 보다 적극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자전거는 에너지 소모를 기준으로 보면 승용차의 52분의 1, 버스의 26분의 1, 전철의 4분의 1 정도이다. 또한 도로를 차지하는 면적도 승용차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버스에 비해서도 1.2분의 1 정도로 낮다. 공해 발생 요인이 거의 없고 건강

에도 좋을 뿐더러 구입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말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교통수단인 것이다. 많은 선진국에서 자전거를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네덜란드는 자전거 이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혀 왔다. 네덜란드는 전국 어느 곳이나 자전거 전용 도로나 나 있으며, 많은 경우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주변 경관을 잘 꾸며 놓아 자전거 이용의 즐거움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조세 제도나 교통 법규 역시 자전거 이용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전체 수송률에서 자전거는 2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 교통수단으로서는 40퍼센트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실정은 어떠한가? 자동차의 천국 한국에서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전체의 1.2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네덜란드의 27퍼센트, 일본의 14퍼센트, 독일의 10퍼센트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치이다.

낮은 자전거 이용률은 자전거 관련 예산이 매우 낮은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부의 통계를 보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총 4744억 7200만 원이 자전거 관련 예산으로 사용됐다. 반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고속도로에 투자한 예산만도 25조 1070억 원에 이르렀다. 깊이 음미해 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민과 국가의 관계 재정립

이제 정치 분야를 눈을 돌려 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2008년 촛불시위는 이명박 정권을 넘어 1987년 이후 지속된 정체체제의

위기를 드러낸 것이었다. 촛불 시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여주었다.

촛불시위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사전토론을 바탕으로 준비된 다양한 시위도구(예: 스티커, 유니폼 등)가 선보였다. 촛불시위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무적의 김밥 부대’ 역시 온라인 공간을 통해 추진된 것이었다. 이러한 특성은 촛불시위의 진행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참가자들이 한 곳에 모여 집회를 할 때는 준비된 연사의 정치연설이 아닌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줄을 이었다. 가두시위가 진행될 때에도 전체 대열을 이끌고 가는 지도부는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시위 참가자들 각자가 판단하여 움직였고 필요하면 즉석에서 토론을 벌이기고 하였다. 평소처럼 ‘대책위’가 구성되었으나 참가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또한 국회나 정당에 의존하지도 않았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그러다 보니 촛불시위의 열기가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 점은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서 2008촛불시위를 이전 시기 역사의 구비마다 등장했던 대규모 투쟁과 구분 짓는 점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촛불시위의 이같은 특성이 새로운 정치체제 구축으로 이어진다면 그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쿠바를 통해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자.

1970년대까지만 해도 쿠바는 소련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모든 책임과 권한은 국가로 집중되었고 인민은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했다. 쿠바는 이러한 관계를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지도 이념을 삼았다. 가령 1970년 7월 26일 ‘몬카다 병영 습격 기념일’에 즈음하여 카스트로는 다음과 같이 연설

한 바 있다.

오늘날 인민 여러분은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옳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적인 의식, 사회주의적 의식입니다. (중략) 인민이 국가에 모든 것을 기대한다는 사실은 혁명이 만든 사회주의 의식이자 인민의 권리인 것입니다.

카스트로의 이러한 발언은 액면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쿠바 인민은 지도자의 명령만 묵묵히 따르고 마냥 국가만 쳐다보는,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인간형으로 되어 갔다. 쿠바 인민들은 정부에 대해 자기주장을 하는 법이 별로 없었고 그저 듣는 데만 익숙해져 있었다.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주장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쿠바 인민은 집이 낡아 페인트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정부가 해줄 때까지 앉아서 기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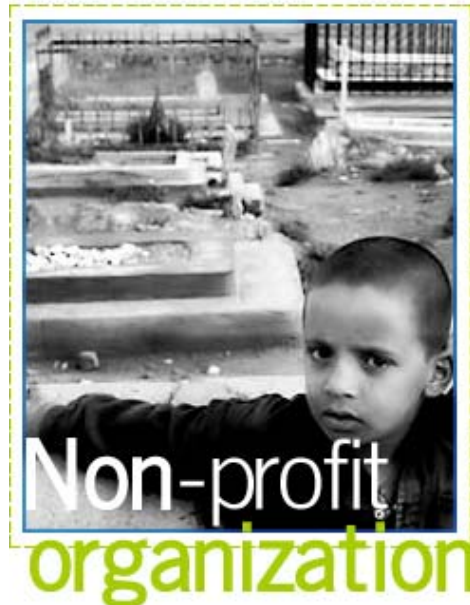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위기 상황이 조성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고 말았다. 위기의 첫 징후는 국가 기구에서 나타났다. 즉 국가 기구가 종전처럼 인민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국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돌아오는 것은 굶어죽는 것뿐이었다. 위기의 순간에 쿠바 인민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 나섰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기농으로의 전환과 도시 농업 개척을 통해 식량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쿠바 인민은 이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변모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쿠바 인민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촉진했던 요소 중의 하나는 위기 이후 2천 여 개 이상이나 새롭게 생겨난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기구)였다. NPO는 시민들에 의해 상향적으로 조직된 시민 NPO와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에 의해 하향식으로 조직된 관제 NPO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는 유기농을 주도한 액타프(ACTAF, 농업기술협회),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펠릭스 발레라 센터,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 프로나투랄레사(ProNaturaleza) 등을 들 수 있다. 관제 NPO로서는 인구의 87퍼센트를 망라하고 있는 혁명방위위원회(CDR), 쿠바노동자중앙연합(CTC), 대학생연맹(FEU), 전국소농협회(ANAP)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NPO는 성향에서 대립적이지 않으며 그 경계 또한 뚜렷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둘 모두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쿠바 인민은 이러한 NPO를 통해 정부 기구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NPO를 통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었고 정부와의 관계도 목적의식적이면서도 선택적으로 맺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국제연대와 이를 통한 해외 원조 확보에서 NPO들의 역할은 독보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면 액타프는 격년으로 유기농업 국제회의를 주최하는데 이 회의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기농업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액타프는 이를 통해 쿠바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격상시켰다. 이렇듯 국제연대 등 많은 분야에서 NPO가 전



다양한 비영리기구(NPO)는 쿠바 인민을 보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위치에 서게 만들었다.

면에서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인민이 정부 기구에서의 종속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쿠바는 자본주의 세계의 기준으로 보면 부유한 나라도 아니고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나라도 아니다. 미국의 배제 전략에 의해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편이다. 이런 점에서 쿠바를 두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말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쿠바 역시도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자본주의 세계와의 공존을 꾀하면서 적극적인 체제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붕괴로 야기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쿠바가 일구어낸 성과는 여러 모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최종 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쿠바는 우리에게 소중한 거울이 되어 주고 있다.□

박세길 - 사회운동 연구가. 저서로는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전3권), 『혁명의 추억 미래의 혁명』 등이 있다.
